

보도시점 2026. 7. 14.(화)
국무회의 통과 후
별도 공지

/ 배포 2026. 7. 14.(화) 08:30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합리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반복적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강화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단, 시행령 제25조의4의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은 '27년 1월 21일 시행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는 신원정보의 범위를 합리화하였다(시행령 제25조의3).

그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관계 없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 해당하는 5가지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간 거래(C2C)에 있어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 판매중개업자는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만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도록 하였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1항

둘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였다(시행령 제25조의4).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①전년도(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②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 ③법을 위반하여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였다.

더불어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후 지체 없이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공정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셋째,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하였다(시행령 제27조의3).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 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①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②게시 기간, ③등급 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④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하였다.

※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 관련 규정은 규제합리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배포 예정

넷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하고, 과징금 감경 비율을 축소하였다(시행령 별표2, 과징금 고시).

경제적 제재를 통한 법 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1회 반복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종전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였다.

그 밖에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 사항들을 시행령에 규정하였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는 대신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간 거래(C2C), 해외직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여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3. 개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효식 (044-200-4445)
		담당자	사무관	백승근 (044-200-4449)

붙임1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법 제6조제2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 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삭제 2.·3. (생략)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 -----「개인정보 보호법」----- ----- ----- -----.
제17조(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营业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营业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 ----- ----- ----- ----- ----- ----- ----- -- 제출해야 ----. ----- ----- - 신고증을 첨부하되,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야 --.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 제공)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 정보

2. (생략)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 제공) ① -----

----- 신원정보”란 -----

-----.

1. -----

----- 제
25조의3에서 -----

2. (현행과 같음)

<삭제>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신 설>

제25조의3(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같은 항에 따른 개인 판매자(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5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

<신 설>

당한다)

3.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4.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제2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법을 위반하여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 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고, 해당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5제6항 전단에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재무제표 등 매출액에 관한 자료

<신 설>

2. 사이버몰 접속자 수 등 소비자 규모에 관한 자료

제27조의3(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

1.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2. 사용후기의 게시기간

3. 사용후기의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4. 사용후기의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신 설>

제34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34조의2(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 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 3. (생략)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를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① ----- 법 제32조의4제1항-----

법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
--.

② 법 제32조의4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① 법 제32조의4제3항---

-----.

말한다.

1. ~ 5. (생략)

②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가 같은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
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1.·2. (생략)

3.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
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
매의 내용

4.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
하는 사유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
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2조의4제3항-----

----- 임시중지-----

----- 제출해야 -----
--.

1.·2. (현행과 같음)

3. 임시중지-----

4. 임시중지-----

제34조의5(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32조의4제4항--

----- 제
출해야 ----.

제40조(규제의 재검토) -----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5조의4에 따른 통신
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
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국내대리인 지정기
준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 2027년
1월 1일

4. (현행과 같음)

붙임2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사유		신고사유	
<u><신 설></u>		신고증 분실·훼손 사유	※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이하 생략)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하며,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음과 같이 가중한
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
를 받고 위반횟
수에 따른 가중
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
우: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범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
를 받고 위반횟
수에 따른 가중
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
우: 100분의 40
이내

<신 설>

-.

(가) --- 5년간 1회

2점 -----
----- 40 초
과 100분의 50 -
--

(나) --- 5년간 2회

3점 -----
----- 50 초
과 100분의 70 -
--

(다)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범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
를 받고 위반횟
수에 따른 가중
치의 합산점수가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범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
를 받고 위반횟
수에 따른 가중
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
우: 100분의 50
이내

(2) (생략)

3.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가.·나. (생략)

다. 감경사유 및 비율

(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

(가) 위반행위로 인
한 소비자피해를
전액 보상하거
나, 원상회복 조

5점 이상인 경
우: 100분의 70
초과 100분의 90
이내

(라) --- 5년간 ---

----- 90 초
과 100분의 100

(2) (현행과 같음)

3.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1) -----

(가) -----

상당 부분 -----
----- 등

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
한 소비자피해를
50% 이상을 보
상하고, 원상회
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1
0 이상 100분의
20 이내

(다) 위반행위로 인
한 소비자피해를
50% 미만을 보
상하고, 원상회
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1
0 이내

(2) 위반행위 자진시정
에 따른 감경

(가) 사건심사 착수
보고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10
0분의 2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
보고 후, 심의일

위반행위의 효과
를 상당 부분 제
거한 --- 10 --
-

(나) 위 (가)의 행위
가 조사가 개시
된 이후 또는 심
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경을
을 축소할 수 있
다.

<삭 제>

<삭 제>

까지 자진시정한

경우: 100분의 1

0 이내

(3) · (4) 삭제

(5) (생략)

(5) (현행과 같음)